



## 자원순환정책의 순항



김 병 오

환경전문기자회 회장

우리나라 폐기물의 총 발생량은 1993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은 종량제 시행이후 재활용률의 증가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발행한 2010년 환경백서에 의하면 1995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72.3%를 매립처리하고 23.7%만을 재활용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정책 등에 힘입어 2009년에는 재활용률이 61.1%로 크게 증가하고, 매립처리율은 18.6%로 낮아지는 등 폐기물처리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순항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폐기물로 인한 단순 오염방지 정책을 넘어 환경성이 보장된 순환자원 공급, 폐자원 바이오매스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등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특히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과 에너지화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의 효율화, 재활용품 유통구조의 선진화,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재활용품 수요기반 및 재활용의식 확산,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등을 꼽을 수 있다.

폐기물에너지화 정책은 고유가 시대에 매우 시기적절한 자원절약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 환경부는 위와 같이 자원순환정책의 양대 축을 수립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 입안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협조 없이는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사전에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국민 홍보로 정책의 효율성을 찾아야 한다.

셋째,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이 펼쳐져야 하며,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정책, 사적이 아닌 공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최근 일본의 지진 쓰나미 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활용 상식 계고를 통해 현실을 재조명하고 녹색성장을 견인해 가야할 것이다. 재활용은 이제 더 이상 '헌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순환시킨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